

“상습 체납차량 꼼짝마…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광주특별시 북구, 31일까지 단속…자동인식·이중 확인
지상·지하주차장 등 살살이…관외차 포함·재산 압류도

“핑통. 체납차량입니다.”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 체납단속 차량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자 차량 양쪽에 설치된 카메라가 번호판을 썰 새 없이 읽어냈다.
잠시 후 한 차량 앞에서 안내음이 울렸다.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단속 차량에 설치된 태블릿 PC에는 차량 소유자 정보와 체납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연식 등이 표시됐다.
단속반원은 휴대용 단말기의 ‘바로일터 현장’ 앱으로 해당 차량을 다시 조회했다. 자동인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줄이고 주차장 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 확인 절차다.
체납 차량으로 최종 확인되자 단속반원은 체납 내역을 재차 확인한 뒤 공구를 꺼내 번호판을 떼어냈다. 차량 앞 유리에는 차량 등록번호와 성명, 영치 장소와 시간, 체납총액 등이 적힌 영치증이 부착됐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차량 가운데 업상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차량은 168만 6400원이었으며, 지방세 등을 모두 합친 체납액은 377만2970원에 달했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등의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집중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후 60일이 지난 차량이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4인 1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차 단속을 벌인 뒤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2차 현장점검을 돌며 체납 차량을 확인한다. 지

상과 지하주차장 등 차량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간다.
관의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차량이 북구에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에도 제약

을 받는다. 영치 후 24시간까지는 운행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운행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북구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7월 체납자들에게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체납 차량 가운데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은 차량 자체를 압류하는 대신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찾아 징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차량을 통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체납 세금이 장기간 방치되면 차량뿐 아니라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정조치에 앞서 자진 납부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광주 20일까지 최대 100mm 비…돌풍·번개도

곳곳 강한 소나기…비 그친 뒤 무더위·열대야 이어져

전남광주 지역에 20일까지 최대 100mm 인량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20일까지 구름이 많거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다.
19일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5~30mm의 비가 내린 뒤 낮 12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는 지역에 따라 5~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5~2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에서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온은 19일 아침 최저 23~25도, 낮 최고 30~32도, 20일 아침 최저 23~25도, 낮 최고 29~3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비가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와 함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당분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임재웅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1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단 서구협의회 이정순 회장과 봉사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봉사단 서구협의회에서 300인분의 식사와 과일을 후원했다.

“AI·반도체 인재 양성”…광주 미래교육 속도

광주특별시교육청 ‘K-교육통합추진단’ 재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 통합추진단을 재편하고 AI(인공지능)·반도체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과정·평가 체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통합 출범에 따라 시·도교육청 간 통합 업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만큼, 기존 통합 업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을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추진단의 기능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8일 K-교육통합추진단을 △교육과정개발평가

팀 △미래전략산업인재팀 △통합교육지원팀 △통합행정지원팀 등 4개 팀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은 전남광주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공학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AI·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수학·과학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고 맞춤형 거점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미래전략산업인재팀은 전남광주미래전략산업인재원 설립을 추진하고 직업계

고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AI·반도체 교육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통합교육지원팀은 교육 분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교육·학예 분야 통합 업무를 총괄하고 통합정책 분석, 과제 관리, 부서 간 지원·총제, 백서 발간 등을 담당한다. 통합행정지원팀은 행정 분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통합 행정업무를 분석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한다.
통합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AI·반도체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

‘5억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일당 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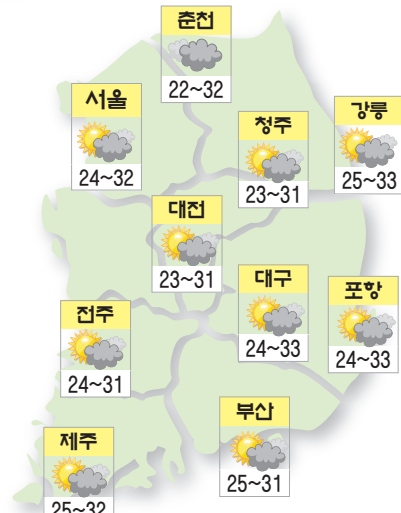
광주 등 전국적 범행…피해금 추적 분석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여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18일 사기·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유사 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3)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3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서울, 군산 등에 사무실을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령층을 상대로 재산 가치가 없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된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특별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 대상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계좌 등 추적 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의 실체를 특정했으며 서울 본사와 광주센터장 일당을 검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55	달빛	12:32
예보	19:17	달빛	22:37



광주	☁	24~31
목포	☁	25~31
여수	☀	24~30
순천	☁	24~31
구례	☁	23~30
광주	☁	24~31
임도	☀	25~31
목신도	☀	25~30
전남	☀	24~31
진도	☀	24~30

목포	미물(고)	06:13 / 18:57
여수	샘물(저)	11:23 / 23:50
목포	미물(고)	00:26 / 13:07
여수	샘물(저)	06:27 / 19:02

70대 기어 조작 미숙

만년필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 전통시장 인근 분식집에 승합차가 돌진한 사고는 70대 운전자의 기어 조작 미숙 때문인 것으로 공식 확인.
18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43분께 광주 동구 산수시장 인근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분식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인 배우자 B씨를 비롯해 분식집 주인과 시장 이용객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
경찰 조사 결과 승합차 운전자 A씨는 해당 사고 직전 앞차를 들이받은 뒤 기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특히 후진기어에서 전진기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등 A씨의 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차량은 시장 내 분식집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
경찰은 이번 사고를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따른 사고로 종결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소년범죄 대응 ‘변화 조짐’

정부, 강력·중대·반복범죄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검토
“범죄 늘고 예방·재활 미흡…재범 방지 대책 강화 시급”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남·광주에서도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절도와 폭력, 성범죄가 반복되면서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대표적인 보호처분이다. 다만 정부안이 입법화될 경우 강력·중대·반복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

상이 될 수 있다.
촉법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금은방 절도와 차량 절도, 집단폭행 등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이 소년부에 송치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에서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 2022년 651명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1063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 84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931명으로 늘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에는 절도 567명, 폭행 200명, 성폭력(강간·추행) 36명, 방화 2명이었고, 2024년에는 절도 429명, 폭행 182명, 성폭력 28명, 방화 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절도 463명, 폭행 211명, 성폭력 42명 등 절도와 폭력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촉법소년은 2019년 301명에서 2020년 342명, 2021년 560명, 2022년 559명으로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 역시 폭력과 절도, 성범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소년범죄 예방체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범정부 협의기구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건송치 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호처분에는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피해자 진술권 보장과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절도와 폭력 등 반복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개입과 상담, 보호관찰,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책임을 묻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병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는 처벌 여부만으로 해

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교육당국이 협력해 법교육과 범죄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범죄의 결과와 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소년범죄는 다양화·흉포화되고 있지만 예방과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반복 범죄에는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과 치료, 보호관찰, 가정·학교 연계 프로그램, 피해자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